

조합장 딸·조카·처남, 지분쪼개기 된 건물 분양권 노렸다

학동 4구역 2가구 6세대로 쪼개진 분양권 3개 인정해 달라며 소송 조합장 친인척이 조합 상대 소송한 셈...2018년 당시 56명 소송 법원은 1·2심서 인정 안해...조합장·구청 공무원 관여 의혹 무성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학동 4구역 재개발 조합장의 친·인척들이 사업구역 내에서 지분쪼개기가 이뤄진 건물 매입해 아파트 분양권을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분쪼개기가 된 건물을 사들여 소유권

이전 절차를 거친 뒤, 분양권을 인정해달라며 소송까지 제기했다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실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법조계에 광주시 동구 등에 따르면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원들 56명은 지난 2018년 5월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광주지법에 '관리처분계

획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설립 인가(2007년 8월 29일)가 난 이후 사업구역 내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을 확보한 만큼 소유자별로 1개의 분양권을 인정해달라는 취지였다. 이들 56명 중에는 현 학동 4구역 조합장 A씨의 딸·조카·처남 등 친·인척 3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사업구역 내 다가구주택(2가구)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바뀐(지분쪼개기) 6세대 중 3개의 소유권을 사들여 분양권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조합장 친·인척들이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셈이다. 6세대 중 조합장 친인척이 사고 남은 3개의 소유권 중 하나는 학동 3구역에서 현 조합장과 함께 조합 일을 봤던 간부가 사들였다.

1·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 요구와 관련, '애초 2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됐는데, 다세대주택으로 바뀐 뒤에도 각 면적이 17.4~23.4㎡에 불과해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독립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분양권을 노린 지분쪼개기를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1심과 항소심 법원은 이들 4명에 대한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이 이들 외 나머지 40여명에 대한 분양권을 인정할 것과는 사뭇 다르다. 이같은 점을 들어 조합 안팎에서는 지분 쪼개기를 통한 소유권 확보와 소송 과정을 조합장이 인식, 관여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무성하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장 친·인척들이 해당 다세대주택을 사들이기 한달 전 지분쪼개기가 이뤄졌고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바꾼 인몰도 현 조합장과 함께 학동 주민 자치회 활동을 오래도록 함께 했다"면서 "지분쪼개기에는 구청 공무원도 관련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조합 안팎에서는 이같은 지분쪼개기 정황 등을 들어 상당수 조합 관계자와 측근들의 지분쪼개기를 통한 분양권 확보가 이뤄졌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광주일보노는 이와관련, 조합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이 닿지 않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19 신고하고 구급차 이송 현장에 있었다는데... "즉시 구호 안하고 목격자 행세...뺑소니"

광주지법, 징역 4년 선고

'직접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로 옮겨질 때까지 현장에 있었어요. 경찰관에게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전달했습니다.' A(74)씨와 변호인은 교통사고를 낸 뒤 이같은 구호행위를 한 만큼 뺑소니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뺑소니(도주차량)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6시 30분께 광주시 서구 동천동 한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B(여·77)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도주 범의(犯意)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선,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도 즉시 119 신고를 하지 않고 차를 아파트 주차장으로 옮겨 주차한 점을 들어 도로교통법(54조 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를 낸 경우 즉시 정차하여 구조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토록 규정했다. 경찰에 신고할 의무도 부여하고 있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119에 신고하기까지 대략 5~6분이 걸렸다. 사고 직후 40초 간 정차했다가 주차장으로 옮겼고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한 뒤였다. A씨는 차량을 주차하고도 바로 피해자 쪽으로 가지 않았다. 119 신고도 인근 주민이 지나가는 A씨를 발견하고 요청한 뒤 이뤄졌다. 119 신고때나 구급대원이 출동했을 때 "내가 사고를 냈다"고 말하거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았다. 119 구급대가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길 때 동행하지도 않았고 사고 4 시간 뒤 현장에 찾은 경찰에게도 목격자인 듯 행세했다고 다음날 경찰 조사 때 사고낸 사실을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이같은 행동 등을 들어 도주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를 내고 즉시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고 목격자인 듯 행세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반영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전두환 항소심 재판 7월 5일 열려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재판이 오는 7월 5일 열린다.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다음 달 7월 5일 오후 2시, 전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재판을 열고 재판 방청권 33석분을 선착순 배부한다. 선착순 배부는 재판 시작 전 오후 1시 10분부터 재판이 열리는 광주법원청사 법정동 제201호 법정 입구에서 진행된다.

우선 배정 방청권(기자단, 피해자 가족 등) 38석을 제외한 나머지 방청석 수는 65석이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33석만 일반 방청객용으로 제공된다. 전씨는 이번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일반 방청객은 방청권에 기재된 좌석에 착석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수소연료전지 드론 운행 시연 28일 오전 광주 북구 드론공원에서 열린 수소연료전지 드론 실증화 사업 시연회에서 한국과 러시아가 공동기술개발한 수소연료전지 드론을 운행 시연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곡성 출신 최관호 기획조정관 치안정감 승진 고흥 출신 이명호 세종경찰청장 치안감으로

곡성 출신인 최관호 경찰청 기획조정관은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고흥 출신인 이명호 세종경찰청장도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정부는 28일 최관호 경찰청 기획조정관을 포함한 경찰 치안정감·치안감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최 기획관과 이규문 서울경찰청 수사차장, 이철구 충남경찰청장, 진교훈 전북경찰청장 등 4명은 이번 인사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하게 됐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 계급인 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국가수사본부장과 경찰청 차장, 서울·부

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으로 경찰 내 7명 밖에 없는 최고위직이다. 이명호 세종경찰청장을 비롯, 김광호 경찰청 대변인,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파견된 김학관 경무관, 행정안전부로 파견된 이상을 치안정책관, 박성주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등 6명은 치안감으로 승진한다. 경찰청은 고위급 승진 인사 뒤 시도 자치경찰위와 협의 과정을 거쳐 다음 달에 시도 경찰청장을 포함한 보직 인사를 발표할 전망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대필 보고서로 입상 41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대필 보고서로 입상한 학생 39명과 학부모 2명 등 41명을 업무방해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39명은 고등학생이던 2017년~2019년 대입 준비를 위해 입시컨설팅 A학원에 등록한 뒤 강사가 대신 써준 보고서 등을 자신이 직접 쓴 것처럼 꾸며 각종 대회 관계자의 공정한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필 보고서로 대학에 수시합격한 10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입상은 했지만, 대입에 영향을 받지 않은 29명은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학원장은 먼저 기소돼 올 3월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학원 부원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